

남한사회 탈북단체의 활동과 인정의 정치:

국내외 정치적 맥락을 중심으로*

신난희**

본 논문은 남한사회에서 탈북단체가 급증하며 대북한 정치활동을 활발히 전개한 현상을 국내외 정치적 맥락에 근거해서 분석했다. 본 논문에서 남한사회는 글로벌 생활세계로서 탈정치적이고 탈권력적인 일상영역이라고 보지 않는다. 특히 70년 분단체제가 고착화한 한반도에서 북한관련 이슈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신냉전 양상은 남한사회라는 글로벌 생활세계에 담긴 정치적 맥락과 탈북이주민 행위자 사이에 일어나는 역동성을 잘 보여준다.

본 논문은 탈북단체가 출현하고 활동한 내용을 북한민주화활동, 통일항아리운동, 그리고 중복 세력 규탄 시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탈북단체는 NED, BDHRL 등의 북한민주화 관련 기금과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 다변화된 탈북이주민 지원 사업 등에 힘입어 급성장하였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북한민주화 관련 이슈뿐 아니라 남한사회 정치 이슈로까지 활동을 확장하며 남한사회 보수 세력의 이해를 충실하게 대변하고 실천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정치세력화를 추구하며 ‘인정의 정치’를 펼쳤다. 그러나 탈북단체의 실존적 위상은 여전히 조건적인 것

* 이 글은 연구자의 박사논문 제4장 2절을 기초로 <Homo Nomad: the Dilemma & Tasks for Social Integration>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보완하여 작성한 글임.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음(NRF-2013S1A5B8A01054225).

** 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소 연구교수

으로 계도와 경향과 독자적 세력화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요개념〉: 탈북단체, 북한인권법, 북한민주화활동, 통일항아리운동, 중
북 세력 규탄 시위, 미국민주주의기금(NED)

1. 문제제기

1990년대 초 소련 및 동유럽사회주의권 국가가 해체되고 자본주의가 전지구로 확산되던 시기에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한 북한에서 식량 및 생필품 배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식량 및 생필품 미공급 사태는 연이어 북한사회 전반의 경제위기로 번져나갔다. 북한주민은 생계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한국으로 그리고 전지구로 이동하였다.

본 논문은 남한사회로 들어온 탈북이주민이 단체를 결성하고 북한 관련 정치활동을 활발히 전개한 현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남한사회에서 탈북단체¹⁾는 그 결성과 활동 성장의 속도가 일반 시민단체와 다르다. 탈북단체는 시민적 기반도 약한데, 단체의 결성과 성장 속도가 대단히 빨랐다. 탈북단체는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기에 만들어져 그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이들은 왜 유독 대북한 정치활동에 그토록 몰두하였는가?

본 논문은 탈북단체의 출현과 활동을 분석함에 있어서 남한사회가 놓인 정치적 맥락을 주목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남한사회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체제의 정치적 맥락이 복잡하게 작동하는 글로벌 생활세계

1) 본 논문에서 탈북이주민의 단체를 탈북이주민단체라고 하지 않고 탈북단체라고 한 것은 탈북단체가 비록 탈북이주민의 집합체이기는 하지만 탈북이주민 단체의 출현과 활동에 이주보다 민족 이슈가 현상적으로 더 두드러진다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 여기서 탈북단체는 탈북이주민이 대표로 있으면서 단체 회원이 탈북이주민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라고 전제한다.) 따라서 남한사회 탈북단체 또한 이러한 글로벌 생활세계로서 남한사회를 관통하는 국내외 정치적 맥락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본다.

탈북단체 활동을 국내외 정치적 맥락에서 분석하겠다는 것은 이들의 사회적 존재성이 일상이라는 탈정치적 공간에 기반하고 있지만, 이미 그 일상을 일상으로 구조화한 차원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 즉 ‘일상의 구조화’ 과정에는 특정 집단의 욕망과 이해가 작용한다고 할 때, 이러한 ‘드러나지 않는 전(前)과정’, 메타 프로세스(meta-process)와 탈정치적 외연의 일상에 놓여 있는 행위주체 사이에 어떤 정치적 역동이 일어나는지 분석이 필요하다.³⁾

탈북단체 활동을 정치적 맥락에서 분석하려는 것은 분단체제인 남한사회에서 북한 관련 이슈가 일으키는 이념적 파장 때문이기도 하다. 남한사회는 군사독재체제에서 그리고 민주화시대를 거치면서도 북한체제와의 적대적 대립구도가 사회를 근원적으로 규정해 왔다. 그리고 이 대립구도는 국내정치에 활용되어 ‘적대적 의존관계’를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관련 이슈가 현실 생활에서 일으키는 파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맥락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을 수 없다.

본 논문은 탈북이주민의 단체 결성과 활동을 이주민 집단이 이주지 공간에서 집단적으로 전개한 적응의 한 양상으로 보고자 한다. 탈북단체의 집단적 적응 양상은 대단히 전략적이고 정치적이다. 이들은 이주

2) 글로벌 생활세계 개념의 연원은 글로벌리제이션과 생활세계 두 흐름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글로벌리제이션 개념이 1997년 <Globalization and Indigenous Culture>에서 로버트슨에 의해 언급되면서 주목되기 시작했다면, 생활세계 개념은 베버, 후설, 슈츠로 이어지는 철학적 토양에서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Robertson 2013: 164; 김태원 2012: 67, 69-73). 본 논문에서는 글로벌 생활세계가 일상의 의미 영역이면서 동시에 의미의 창출자인 행위 주체의 물리적 조건을 구조화하는 정치적 공간이라는 점을 주목한다.

3) 국가기구 혹은 권력집단이 일상적이고 미시적인 차원에서 일반 대중을 규율하고 통제하는 방식에 관해서는 푸코(M. Foucault)의 연구가 중요하다. 또한 권력이 관철되는 과정에서 일반 대중이 보여주는 일상생활에서의 미시적 저항에 관해서는 미셸 세르토(M. Certeau), 제임스 스콧(J. Scott) 등의 연구가 있다(김영민 2009: 30-33).

지 공간의 주류 권력이 강제하는 종속적이고 동화주의적인 요구에 기계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탈북이주민집단은 주류사회의 강력한 동화와 순응 압력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주체적이고 전략적으로 최적의 적응 조건을 만들기 위해 투쟁한다. 순응이 여기에 부합하면 순응 전략을 구사하고 저항이 여기에 부합하면 저항 전략을 구사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탈북이주민집단의 집단적 대응 양상을 탈북이주민집단의 ‘인정의 정치’로 해석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탈북단체의 출현과 활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2. 기존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

그동안 탈북이주민에 관한 연구는 제도, 직업, 문화, 언어, 심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연구 대상도 탈북이주민 일반에서 여성, 청소년 등으로 세분화되어 왔다(윤여상 2001; 김태현·노치영 2003; 이민영 2004; 박정란 2006; 김현경 2009; 김희순 2009; 김광웅 2011; 김신희 2012; 김유정 2012; 양수경 2013; 김중태 2014; 신난희 2014).⁴⁾ 그러나 기존 연구는 일반적으로 탈북이주민을 개별이주민 차원에서 접근한다. 집단적 차원에서 연구하는 경우에도 조사 규모를 양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탈북이주민의 집단적 경향성에 관해서는 관심도 적었고 연구도 많지 않았다.

탈북이주민의 적응 문제를 개별이주민 차원에서 다루게 되면, 적응을 다루는 방식도 동화주의 관점에서 개인의 적응/부적응에 머무는 경향이 있다. 많지 않지만 탈북이주민 문제를 개별이주민 차원에서 접근하면서도 개인보다 사회의 구조적 맥락을 다룬 연구가 있다(정병호

4) 탈북이주민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한 논문으로는 최대석·박영자 2011: 권혜수·남명구 2011: 박정란 2012: 박광택 2014: 윤혜순 2014: 금명자 2015 등이 있다.

2004: 유지웅 2006). 남한사회의 사회적 성격이 다문화 이주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탈북이주민도 단순히 남한사회에 동화될 대상이 아니라 다문화 이주사회의 소수자로, 존중되어야 할 고유한 정체성을 지닌 공존의 대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한사회에서 탈북이주민은 소수자이고 이주민이면서도 현상적으로 볼 때 이주나 적응 양상이 대단히 독특하다. 이들의 전 지구적 이주 양상을 분석한 연구⁵⁾에도 소개되고 있지만, 탈북이주민의 이주 동기와 전 지구적 확산에는 국내외 정치적 맥락이 과도하게 작동하고 있다. 또한 탈북이주민 자체가 자신이 다문화 이주민으로 불리는 것을 낯설어하는, 여전히 민족적 정서가 강하게 작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탈북이주민에게 나타나는 민족적 경향을 북한사회에서 학습된 민족의식이 이주지사회에서 적응의 기제로 강화되어 출현한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즉 민족의식은 새로운 적응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강화되며 재구성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탈북이주민의 민족의식은 탈북이주과정에서 적응의 한 자원으로 활용되며 재구성된 것이고 이러한 적응방식이 집단적으로 표출한 것이 탈북단체의 결성과 활동이라고 보고자 한다.

탈북이주민의 집단적 경향성에 관한 연구는 국내보다 국외 단체에 대해 먼저 이루어졌다(신난희 2008). 그러나 이것은 미국거주 탈북이주민의 적응을 조사하는 과정에 탈북단체 활동이 발견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내용과 분석이 소개 차원에 머물고 있다. 이 시기 국내 탈북단체 연구도 단체 조사가 주 목적이기보다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를 조사하면서 함께 소개하는 정도였다고 할 수 있다(이준태 2015: 4-8).

본격적으로 국내 탈북단체 연구가 나온 것으로는 나경아·한석진(2009), 김한나(2010), 김영석(2011), 김기선(2013), 이준태(2015) 등을

5) 관련 연구로는 오원환(2011), 박명규·김병로·송영훈·양운철(2011) 등이 있다.

들 수 있다. 김한나(2010)는 온라인 공간의 대북 시민단체 간 이념과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탈북단체의 이념 성향과 활동이 남한사회 보수단체의 활동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나경아·한석진(2009)은 ‘평양예술단’의 공연 활동과 레퍼토리를 분석하고 탈북이주민 예술단체의 사회문화적 정체성과 가치를 살펴보았다. 김영석(2011)은 남한사회에 대북빠라 활동이 어떻게 출현하는지 살펴보고 대북빠라와 관련된 다양한 주체의 반응과 대북빠라 발송 관련 논쟁을 분석하였다. 김기선(2013)은 국내 탈북단체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시기별로 구분하고 각 시기에 이루어진 탈북단체의 활동을 분석하였다. 이준태(2015)는 탈북단체를 포함하여 남한사회의 NGO가 어떤 맥락에서 출현하는지, 또한 어떤 국제적 행위주체가 이러한 단체의 출현과 활동을 지지하는지 분석하였다.

그동안 탈북이주민⁶⁾ 연구는 북한 및 탈북이주민의 인권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왔다. 김기선(2013)과 이준태(2015)의 연구는 이러한 연구 경향에서 한발 나아가 이론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자원과 기회(이준태 2015: 8) 조건을 중심으로 다양한 행위 주체가 실제로 단체의 존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힌 김준태의 연구는 남한사회의 복잡한 정치 이데올로기적 지형을 세밀히 분석하여 탈북단체의 정치적 맥락을 이해하는 초석을 세웠다.

위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탈북단체의 출현과 활동이 분단과 신냉전 구도와 연결되어 있음을 정확히 읽고 있다. 시기적으로 국내외 권력 집단의 정치적 이해가 탈북단체의 출현과 활동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상의 문제의식을 함께 하면서 남한사회라는 글

6) 한국으로 이주한 북한주민을 호명하는 용어는 대단히 다양하다. 필자가 본 논문에서 ‘탈북이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탈북이주민 스스로 자신을 ‘탈북민’으로 부르는 경향에서 출발한다. 탈북민은 남한사회에 일반화된 ‘탈북자’ 용어에 법률용어인 ‘북한이탈주민’을 접합하여 만든 것이라고 생각된다. 탈북이주민은 이러한 탈이름 방식에 연구자의 ‘이주 프레임’을 접합하여 만든 것이다.

로컬한 정치 공간에서 이주지 권력집단과 이주민집단이 어떻게 공생적 관계를 형성하며 각자의 정치적 이해와 목적을 이루어가는지 탈북단체의 출현과 활동을 중심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자료 수집에는 문헌조사, 참여관찰, 집중 인터뷰, 구술생애사 방법 등이 사용되었다. 문헌조사는 사회적, 문화적으로 오랫동안 교류가 단절되었던 북한사회의 특성으로 인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작업이었다. 문헌조사는 연구의 설계 초기에도 중요하지만 연구 중간에 새롭게 발견된 사실을 이해하고 확인하는 작업에서도 중요하다. 탈북이주민과 탈북단체에 대한 참여관찰은 탈북단체, 정부기관, 교회단체, 개별 탈북이주민의 가정과 직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탈북이주민이 남한출신 연구자를 강하게 의식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리고 연구자 또한 연구 대상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관찰자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함께 하였다. 그러다가 점차 서로 간에 신뢰와 공감의 깊어지면서 관찰과 참여를 함께 넓혀 나갔다.

사실 탈북이주민과 연구자의 첫 대면은 2006년 탈북청소년의 검정고시 준비를 도우면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표면적인 이해를 넘어 탈북이주민 내부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된 것은 한 탈북단체에서 실무자로 일하면서이다. 탈북단체의 폐쇄성과 남한출신에 대한 경계심을 넘어 탈북이주민 내부 세계로 들어간 것은 연구자로서 행운이었다.

그러나 탈북단체에서 내부자로 일하는 것은 연구자에게 무척 곤혹스럽고 힘든 시간이었다. 화가 나면 ‘대가리를 까부수고 말겠다’는 말이 서슴없이 쏟아지고 ‘북한사람이 돌고래보다도 못하냐’며 분개할 때는 곤혹스러움을 넘어 감감한 단절감이 밀려들었다. 하지만 짧지 않은 시간을 함께 하면서 연구자는 이들로부터 차이를 넘어 ‘다르지만 함께 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본 논문의 자료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수집되었다.

3. 탈북단체의 출현과 활동

1) 탈북단체 출현의 정치적 맥락

2000년대 남한사회에 탈북단체의 출현이 빈번해진 데에는 먼저 남한사회 내에 탈북이주민의 수가 증가한 것을 들 수 있다. 남한사회로 유입하는 탈북이주민의 수는 1990년대 사회주의권의 해체 이후 점차 증가하다가 미공급기에 중국으로 월경하여 생활하던 탈북이주민이 남한사회로 들어오면서 급격히 증가하였다.⁷⁾ 이 시기는 중국에 흩어져 살던 탈북이주민이 남한사회로 들어오는 한편, 이미 남한사회에 정착한 탈북이주민이 북한 등지에 거주하는 가족과 친인척을 순차적으로 불러들이면서 연쇄 이주가 자리 잡은 시기이기도 하다.

탈북이주민이 인구학적으로 증가한 것은 탈북단체가 출현하는 것뿐 아니라 조직과 활동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이 시기에 입국한 탈북이주민은 대부분 여성으로 북한에서 살며 미공급의 생활고를 겪고 중국으로 들어간 경우가 많았다. 이 시기 탈북여성은 자신도 살아야 했지만 삼국에 흩어져 있는 자녀와 원가족의 생계를 지원해야 하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안고 있었다. 이 여성들은 탈북단체가 활동을 조직할 때 시위 참가자 역할을 담당하였다.

탈북단체의 출현에는 당시 국내외적으로 조성된 정치 지형도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 한국과 미국 정부의 대북한정책은 대조적인 경향을

7) 탈북 당시에는 한국행을 생각지 않던 중국 체류 북한주민이 한국행을 선택하게 된 배경에는 북송 등 중국 체류의 예측할 수 없는 위험과 국내외 인권단체 및 선교단체의 기획 망명 프로젝트가 있다. 국내외 인권단체는 중국 체류 북한주민의 참혹한 현실에 대한 국제 여론을 환기하고 중국 거주를 합법화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기획 망명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중국 체류 북한주민들은 방송 등을 통해 기획 망명 사건을 목격하고 중국 주재 외교 공관이나 대한민국 대사관 등으로 뛰어들었다. 이러한 망명 투쟁 방식은 2002년에서 2004년, 길게는 2006년까지 이어졌다. 이후 인권단체 등의 기획 망명은 중단되었지만 탈북이주민 혹은 조선족 브로커 조직이 그 뒤를 이었다.

보였다. 국내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대북한 화해, 협력, 평화정착의 통일정책 및 대북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부시 정부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북한주민의 참혹한 탈북 실태를 인권담론으로 비판하였다. 북한인권위원회를 미국 의회에 만들고 국내 탈북이주민을 북한인권 청문회의 증인으로 초청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2004년 미국 의회는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⁸⁾

일반적으로 남한사회 탈북단체의 출현과 활동은 시기별로 사회주의권의 해체 이전, 사회주의권의 해체 이후부터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불참 사건까지, 2003년 표결 불참 사건 이후부터 2007년 북한민주화위원회 결성까지, 북한민주화위원회 결성 이후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사회주의권의 해체 이전 시기는 기본적으로 반공주의와 권위주의적 권력체제의 지원을 받는 소위 ‘관변적’ 성격의 탈북단체가 많았다. 탈북단체 활동 성격은 1989년을 시작으로 사회주의권이 해체되고 탈냉전의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바뀌기 시작하다가 북한의 경제위기 상황이 발생하면서 본격적으로 변화하였다. 이 시기에 탈북단체 활동은 두 방향으로 나뉘어진다. 한 방향에서는 여전히 대북한 정치 지향성이 강한 활동을 전개하며 오히려 새로운 사회 분위기를 경계하고 탈북이주민의 결속과 조직화를 도모하였다. 또 다른 방향에서는 정부의 탈북이주민 적응정책에 적극 호응하며 남북주민의 통합과 탈북이주민의 자립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병렬 구도가 통합되는 계기는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들어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불참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노무현 정부는 2005년 탈북이주민

8) 북한인권법은 그 자체로도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법안이 연장되며 2017년까지 자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지만, 정부 기구 및 민간 재단에서 북한 인권 관련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사회적 분위기를 진작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지원정책을 이제까지 보호 중심에서 자립 자활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이 두 사건은 탈북이주민사회에 사실상 실존적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노무현 정부의 탈북이주민정책과 대북정책을 강력히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탈북이주민집단은 1997년 황장엽 비서의 탈북과 한국 입국을 계기로 탈북자동지회 등을 결성하며 탈북이주민 내부 연대를 정비해 왔다. 2000년대 들어서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 인권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탈북단체가 속속 결성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2007년 탈북단체 연합체로서 북한민주화위원회가 출범하였다.

북한민주화위원회가 결성된 2007년은 김대중 정부가 햇볕 정책을 추진하며 분출한 남남갈등이 극도로 격화되던 시기이다. 2004년부터 6·15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대북 방송 및 빠라살포 등 대북 선전 활동이 일체 중단되었다. 그 반면에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사업, 정부 차관 등 북한지원 사업은 더욱 활발해졌다. 대북 지원 사업은 민간 차원으로까지 확대되어 남한사회 전 영역에서 북한 관련 지원 및 협력 사업이 추진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전작권의 환수 등 한미 동맹의 위상을 대등하게 정립하며 이제까지의 일방적이고 종속적인 한미 관계를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북한민주화위원회 결성 이후에 남한사회는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극렬한 남남갈등 정쟁의 핵심이슈였던 대북포용정책을 대북강경정책으로 바꾸었다. 2008년 7월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은 남북관계를 급격히 경색시켰다. 이명박 정부는 마침내 2010년 5·24 조치를 시행하며 본격적으로 대북한 제재 국면을 열었다.

국제적으로도 미국을 중심으로 강력한 북한제재조치가 추진되었다.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와 북한인권위원회 활동이 활발했던 미국은 NED(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와 미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Bureau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을 통해 북한민주화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하였다. 북한 지역으로 직접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남한사회를 기반으로 북한인권 및 민주화 관련 활동을 벌이던 단체가 이 기금의 실제 수혜자가 되었다.⁹⁾

미국의 기금 지원방식은 단체 자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인건비와 단체 운영비까지 지원하였다. 탈북단체는 일단 기금 지원을 받으면 생계와 단체 운영에 대한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남한의 많은 탈북단체가 이 기금을 바탕으로 북한사회 내부를 겨냥한 대북방송, 대북 배라 사업, 북한 내부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벌였다. 그리고 국내 탈북이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민주주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로 보수 정권이 계속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북한인권의 개선을 목적으로 북한당국을 압박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에 동참하였다. 탈북이주민지원방식도 정부 주도로 제도화가 추진되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오바마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제적으로는 유엔에서도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며 북한당국을 압박해 나갔지만, 오히려 미국 내부적으로는 탈북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기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줄이는 정책을 펼쳤다.¹⁰⁾

탈북단체의 출현 과정에는 국내외 권력 집단의 정치적 이해와 욕망이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이들은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실현하기 위해

9)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신장을 위한 지원은 그 명분에도 불구하고 북한사회로 직접 지원할 통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남한에 거주하는 탈북이주민을 지원하여 이들의 가족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논리를 적용하였다. 사실상 북한 변화에 대한 간접 효과를 기대하며 NED는 북한인권 활동을 하는 NGO를 전폭적으로 지원하였다(강명옥 2006: 116-118; 김준태 2015: 67-74).

10) 그러나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나온 후, 미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 규모를 다시 확대하였다. 그러나 지원 방식을 전보다 엄밀하고 까다롭게 하여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기금을 따기 어렵게 설계하였다.

기금 등을 매개로 탈북단체와 연대하였다. 탈북단체 또한 대립하는 정치세력이 만드는 틈새 영역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며 이주지에서의 집단적 적응 기반을 구축하였다.

2) 탈북단체의 활동

남한사회 탈북단체는 인적 구성 및 단체결성 목적 등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1990년대 사회주의권의 변동기에 조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포기하고 적국인 ‘대한민국’을 선택한 초기 탈북이주민이 결성한 탈북단체이다. 두 번째는 북한의 기근을 피해 중국으로 넘어왔다가 2000년대 들어서 남한사회로 들어온 탈북이주민이 결성한 탈북단체이다. 첫 번째 집단은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다는 자부심이 강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정치의식이 높다. 두 번째 집단은 상대적으로 탈북단체의 몸집 불리기를 가능하게 한 집단으로 국내 탈북이주민 정착을 활동의 주요 목적으로 내걸고 현상적으로는 국내 시민단체 규정에 따라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며 정치 활동을 에돌아가는 경향이 있다.

아래에서 탈북단체 활동으로 기술한 북한민주화활동, 통일향아리운동, 중복세력 규탄 시위는 엄밀히 구분되는 별개의 영역이라기보다 주제와 활동에 따라 범주화한 것이다.

(1) 북한민주화활동

탈북단체의 북한민주화활동은 2000년대 초기부터 계속되어 왔지만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2007년 북한민주화위원회 결성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남한사회 보수 세력¹¹⁾과 탈북단체는 활동지향에서

11) 남한사회 보수 세력은 기본적으로 반공을 국시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와 국가독재개발 방식으로 전개된 발전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이준태 2015: 16-18).

햇볕정책과 민주화세력에 대한 비판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북한 당국에 대해서도 정서적인 공감대가 있었다. 많은 탈북이주민이 북한당국을 조롱하거나 증오하였고 보수 세력도 ‘공산독재체제’의 붕괴와 흡수통일을 당연시하였다.¹²⁾ 그러나 지난 십 여 년의 탈북단체 활동에는 단순히 정서적 공감대로 환원할 수 없는 전폭적인 헌신과 치열함이 담겨 있다. 보수 세력과 탈북단체가 북한민주화활동을 매개로 연대한 이면에는 어떤 현실적, 실리적 이해가 작동하고 있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2007년 북한민주화위원회가 결성되기 전부터 이미 탈북단체는 북한당국과 북한 인권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입장을 비판해 왔다. 그러나 2007년 북한민주화위원회 결성 이후 탈북단체의 대정부 비판 활동에는 조직 규모와 투쟁 강도에 있어서 새로운 차원이 담겨 있다.

노무현 정부는 탈북이주민 지원 방향을 보호에서 정착으로 전환하며 현금으로 지급하던 정착지원금을 대폭 감소하고 취업과 연동된 인센티브제를 실시하였다. 초기 탈북단체는 노무현 정부의 이러한 탈북이주민 지원 정책을 비판하였다(정운중 2005: 122-128). 하지만 그 비판은 학술회의장이나 세미나의 장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시위의 형태로 결집되는 정도는 약했다. 그러나 2006년 북한당국이 1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탈북단체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통일정책과 대북협력 사업이 김정일 체제의 목숨을 연명해 준 것이라고 비난하며 대정부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정점에서 북한민주화위원회가 출범하였다.

북한민주화위원회의 출범 시기는 2007년 대선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2005년 노무현 정부의 탈북이주민 지원정책의 방향 전환, 그리고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으로 달궂이기 시작한

12) 그러나 탈북이주민이 북한사회를 회고하는 정서는 단일하지 않다. 북한에서의 생활은 한편으로 개인사와 습합된 세계로 애뜻하고 그리운 정서와 추억이 공존한다. 이것은 남한사회와 거리감을 두며 자신의 정체성을 생성해가는 탈북이주민의 경우에 특히 분명하게 드러난다. 보수 세력의 경우에도 탈북이주민에 대한 감정은 양가적이어서 탈북이주민은 여전히 적과 동포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위험한 대상이다.

탈북단체의 대정부 비판은 대선 국면을 맞아 강렬한 대정부 비판 시위로 변하였다. 북한 출신으로 벌이는 탈북단체의 북한 비판은 그 강도와 선정성에서 충격과 파장이 컸다.

탈북단체는 북한의 거듭되는 핵실험, 금강산 관광객 피격, 연평도 폭격, 그리고 한국행 탈북이주민의 북송 문제 등 북한관련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북한당국을 비난하였다. 이들은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사진과 인형을 불태웠으며 북한을 향해 체제 비판 내용이 담긴 풍선을 날렸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공격적인 대북 정책과 암묵적인 방임에 힘입어 탈북단체는 북한민주화를 이슈로 내걸고 모든 북한 관련 사건을 시위의 소재로 전화하였다. 탈북단체는 남한 주민보다 더 강경하고 더 선동적으로 북한당국과 체제를 비판하였다. 이들이 전개한 격렬한 북한민주화활동은 북한당국의 강경한 반응을 끌어내며 한반도를 대치와 위기 국면으로 몰아가는 데 기여하였다.

(2) 통일항아리운동

통일항아리운동은 일군의 탈북단체가 황장엽 비서로부터 위임된 북한민주화위원회의 지도적 권위를 부정하고 탈북단체연합을 새롭게 결성하면서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한 전략적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통일항아리운동에는 탈북이주민집단이 북한민주화활동을 통해 얻어낸 ‘종족적’¹³⁾ 성과를 어떻게 내부적으로 해체하며 탈북단체의 분화로 나아가는지가 담겨 있다.

2012년 10월 북한민주화위원회 소속 탈북단체가 ‘북한민주화추진 연합회’라는 새로운 단체연합을 만들었다. 그리고 첫 번째 활동으로 통일항아리운동을 내걸었다.¹⁴⁾ 이들은 2012년 황장엽 비서 사망 2주기를

13) 탈북이주민집단은 남한사회에 잘 흡수되지 않고 탈북이주민집단 내적인 연계망과 경계가 공고하다는 점에서 ‘종족적’이라고 표현하였다.

14) 통일항아리 운동은 2010년 8·15 행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세 신설을 언급하고 유우익 통일부장관이 이것을 구체화하면서 등장하였다.

기념하면서 탈북단체연합 발대식을 가졌다. 이들은 왜 황장엽 비서 사망 2주기에 통일항아리운동을 내세우며 단체연합 활동을 시작하였는가?

새로운 탈북단체연합의 출현은 2010년 황장엽 비서 사망 이후 탈북 단체 사이에 발생한 내부 갈등과 관련이 있다. 2007년 황장엽 비서를 중심으로 북한민주화위원회가 출범하던 시기부터 개별 탈북단체 사이에는 활동방식을 둘러싸고 이견과 갈등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황장엽 비서의 조율과 권위에 힘입어 단체 간 갈등은 표면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0년 10월 황장엽 비서가 사망하고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이 바뀌면서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북한민주화위원회는 새로운 위원장을 지지하는 단체와 사퇴를 주장하는 단체로 갈라져 극심한 갈등 양상이 벌어졌다. 결국 위원장의 사퇴를 주장하던 탈북단체가 북한민주화위원회와 결별을 선언하고 새롭게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이하 북민연)를 결성하였다.¹⁵⁾

북민연은 ‘황장엽 비서의 유지를 받든다’는 명분을 내걸고 황장엽 비서 사망일인 10월 10일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12박 13일의 국토대행진 행사를 열었다. 부산, 대구, 대전, 평택, 수원, 서울에서 연이어 열린 국토대행진 행사장에서 정치범수용소 관련 사진전을 열고 통일항아리 모금, 강연행사도 개최하였다. 북민연 출범 행사의 백미는 마지막 날 기획된 ‘임진각 대북한 풍선보내기 행사’였다. 북민연이 이 행사를 발표하자 북한당국은 풍선을 날리는 지점을 폭격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선언하였다. 또 북민연도 풍선보내기 행사를 강행하겠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자 임진각 주변 지역 주민과 남한사회 내부에서는 강경 행사를 주

15)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에 참여한 단체는 다음과 같다.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전략센터, 북한인민해방전선,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자유북한 운동연합, 자유북한방송, 정치범수용소 해제운동본부, 탈북여성인권연대, 통일을 준비하는 탈북자협회, 세계탈북인총연합회, 정치범생존자 유족회, 탈북난민인권연합, 평화통일탈북인연합, 탈북문화예술인 총연합회, 탈북민 자립센터, 탈북인총연합회, 탈북청년연합 (<http://blog.naver.com/kst3175/150149196780>).

장하는 북민연의 활동 방식에 대하여 비판 여론이 일었다. 북민연의 무리한 활동 방식으로 인하여 남북한의 경색 국면이 심화되고 접경지역 주민의 기본생명권까지 위협받는다는 것이다.¹⁶⁾

북민연은 ‘통일항아리운동’이라는 전향적 이슈를 내걸고 활동을 시작하면서 왜 비타협적인 과잉행동주의를 고수하였는가? 북민연의 풍선보내기 행사는 사실상 남북 쌍방 간에 대북 심리전으로 번역되어 남북한 당국 사이에서 쌍방적 안보 위기 국면을 조성하였다(임석훈 2013: 22-23). 왜 이들은 이와 같은 위기 국면까지 자신들의 주장을 밀고 나갔는가?

탈북단체는 이전 시기까지 북한민주화활동의 한 형식으로 풍선보내기 활동을 계속해 왔다. 이들에게 풍선보내기는 새로운 이슈거리가 아니다. 그러나 2012년 10월은 김정일 사망 일주년도 채 되지 않은 시기로 김정은 체제가 아직 충분히 안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시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당국의 강력한 반발과 공세는 충분히 예상되는 것이다. 그러나 북민연 또한 십여 년 동안 묵혀 온 탈북단체 내의 지도 권력 투쟁을 시작한 마당에 유아무야 접을 수 없는 입장이다. 더구나 오바마 정부 이후 국내 탈북단체에 대한 기금 지원이 갈수록 축소되는 상황에서 국내 보수 세력의 탈북단체 지원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시민적 기반이 약한 탈북단체로서 보수 세력이 내걸은 통일항아리모금운동을 지지하고 풍선을 날려 북한당국에 경고 액션을 취하는 것은 북민연이 보수 세력의 중요한 새 파트너로 충분하다는 것을 천명할,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실익을 담고 있었다.

북민연이 보수 세력의 정치적 이해를 충실히 실천하며 조직 기반을 새롭게 구축하고자 한 것은 사실상 탈북단체가 시민단체의 형식을 하고

16) 임석훈(2013)은 2012년 10월 북민연의 풍선보내기 행사에 관하여 북민연, 인간 행위자, 풍선, 전단, 국가위기 관리기구, 언론, 북한 매체, 임진각 등 다양한 행위자가 결합하여 풍선보내기라는 혼종물이 탄생하며 안보 위기를 생성하는 과정을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있지만 자립 기반이 취약한 것과 관련이 있다. 이들은 북한민주화 관련 기금이나 보수 인사의 후원금 등 단체 외부에서 공급되는 자금을 의존하여 단체를 운영해 왔다. 비록 시민단체로 출발하였지만 지향하는 가치와 활동 내용이 시민 다수에게 지지를 받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기금의 중단과 축소로 단체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들은 다시금 보수 세력의 정치적 이해를 실현하며 단체의 정당성과 물질 기반을 보장받으려 한 것이다.

그러나 남한사회의 저항을 받고 풍선보내기 행사가 좌절되면서 탈북단체연합은 활동의 방향이 두 갈래로 분화되기 시작하였다. 한 갈래는 탈북지식인 계층을 중심으로 결집하였다. 이들은 이제까지 자신의 지지기반인 보수 세력의 탈북이주민 관리 질서를 문제 삼았다. 이들은 먼저 보수 세력이 주도적으로 출범시킨 탈북이주민지원의 허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비판하였다. 탈북이주민 지원을 내걸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조직 운영이 탈북이주민의 이해에 반함을 비판하며 남한정부가 자신을 탈북이주민지원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하길 요구하였다.¹⁷⁾ 다른 한 갈래는 이명박 정부 이후 확대해 온 중복세력 규탄 시위를 계속하였다. 이들은 남한사회에 적체되어 있는 탈북여성 인력풀을 활용하며 격렬한 중복세력 규탄 시위를 펼쳤다.

통일향아리운동은 탈북단체 활동이 북한민주화위원회 중심의 단일 지도방식에서 집단 지도 방식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출현하였다. 그리고 이 운동이 좌절되면서 집단 지도 조직을 이루던 탈북단체는 점차 분화되어 나갔다. 한 갈래는 지식인 중심의 단체 활동으로 다른 한 갈래는 활동가 중심의 단체 활동으로 그 성격과 방식이 분화되었다.

17) 탈북단체들,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 결성. http://www.ffnk.net/board/bbs/board.php?bo_table=news&wr_id=527; 2만여 탈북자들이 하나로… 협상장구 단일화.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80578>; 탈북 단체장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불편한 간담회. http://unityinfo.co.kr/sub_read.html?uid=16368§ion=sc4§ion2=; 탈북단체들, 정옥임이사장퇴진운동 전개. <http://newfocus.co.kr/client/news/viw.asp?cate=C01&mcate=M1003&nNewsNumb=20140914514>

(3) 종북세력 규탄 시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탈북단체는 ‘종북세력 규탄’과 같은 국내 정치 관련 이슈에도 개입하였다.¹⁸⁾ 이 시기에 국내 정치 상황은 보수 세력에게 대단히 불리하게 전개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여당의 독주는 민심의 이반을 가져와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눈앞에 닥친 2012년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는 여당의 참패가 예상되었다.

그런데 2012년 2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우연하게도’ 한국으로 오던 탈북이주민의 강제복송 사건이 언론에 유출되었다. 이 소식을 듣고 강제복송 규탄 시위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일어났다. 대선 국면 초입에 발생한 탈북이주민 복송 문제는 몇 달 동안 중요한 정치 이슈로 부상하며 언론을 뒤덮었다. 강제복송 이슈가 가라앉아 가던 2012년 6월에는 임수경 국회의원과 탈북청년 사이에 대단히 민감한 충돌 사건이 벌어졌다. 탈북단체는 임수경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을 상대로 야권 및 종북세력 규탄 시위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탈북단체의 종북세력 규탄 콘텐츠는 여기에 멈추지 않았다. 임수경 의원 관련 종북세력 이슈도 사그라져 가던 2012년 10월에 정문헌 국회의원이 ‘NLL 포기 발언’을 터뜨렸다.¹⁹⁾ 탈북단체는 NLL을 포기한 종북세력 규탄과 NLL 수호의지를 천명하며 끊임없이 시위를 이어갔다.

이들이 대선국면을 맞아 수도 없이 많은 규탄 시위를 벌일 수 있었던 것은 시위에 기꺼이 참가할 탈북여성 인력풀이 있었기 때문이다. 탈북여성은 일종의 동원조직망을 구축하고 시위 오더가 내려오면 바로 동원 인력을 조직했다.²⁰⁾ 탈북여성과 탈북단체의 공생 구조가 여기에서

18) 이명박 정부 출범을 이후 탈북단체의 종북세력 규탄 활동에 관한 자세한 일지는 시난희(2014: 273-274)에 정리되어 있다.

19) 정문헌 국회의원은 2012년 10월 통일부 국정감사, 대선유세 등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회담에서 서해북방한계선(NLL)을 포기했다는 발언록이 있다”고 말해 ‘NLL 포기 논란’에 불을 붙였다.

20) 시위에 참가하는 인원을 동원하는 조직망은 탈북단체 관리자, 중간 조직책, 그리고

만들어졌다. 탈북단체는 중복세력 규탄이라는 명분과 인정을 얻고 탈북 여성은 생계의 가뭄돈을 얻으며 이들은 수많은 중복세력 규탄 시위를 이끌었다.

19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혐의 사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사건, 이석기 의원의 처벌과 통진당 해체 촉구 등 탈북단체의 중복세력 규탄 시위는 끊이지 않았다. 탈북단체장들은 현충원을 참배하고 국정원의 역할 강화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탈북단체의 중복세력 규탄 시위는 2014년 세월호 국면에서, 전교조 법외노조에서, 그리고 남한사회의 온갖 정치 국면에서 여전히 진행 중이다.

4. 결론 및 전망

본 논문은 논의를 시작하면서 남한사회의 일상 영역이 비록 현상적으로 탈정치적 외연을 하고 있지만, 전 지구적 자본주의체제에서 결코 탈정치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전제하였다. 특히 칠십 년 분단체제가 고착화된 남한사회에서 북한 관련 이슈는 그 자체로 정치적 맥락을 생성한다는 점을 주목하여 탈북단체의 출현과 활동을 국내외 정치적 맥락에서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에 의하면, 남한사회에서 탈북단체는 국내외 정치적 맥락 속에서 출현하고 활동하였다. 국외적으로는 미국의 NED 기금, 미국무부의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 기금 등이 단체 출현과 활동에 직접적인 자원으로 기여하였다. 국내적으로는 보수 정부가 계속 이어지면서

시위 참가 탈북여성의 피라밋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탈북단체에서 오더가 떨어지면 단체 관리자는 지역별로 참가인원을 정하여 각 중간 조직책에게 전달한다. 그러면 중간 조직책이 자기 지역에서 시위 참가 인력을 조직한다. 시위에 참가하면 일반적으로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몇 천원에서 몇 만원 현금이 지급된다.

안보 및 시민교육을 지원하는 정책이 펼쳐진 것도 탈북단체 활동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탈북단체와 보수 세력 사이에는 ‘보수 정권의 창출과 지속’, 그리고 ‘탈북이주민 정치세력화’라는 공생적 이해관계가 구축되었다. 보수 세력은 탈북단체의 ‘충성’을 기폭제로 사회의 보수적 지형을 공고히 하며 정권의 창출과 지속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 탈북단체 또한 남한사회 2등 국민으로 폄하되며 경계와 차별의 대상으로 치부되던 탈북이주민의 남한사회 위상을 해체하고 시민적 권리와 안정을 얻어내는 ‘탈북이주민 정치세력화’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

그러나 북한민주화 관련 기금 지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시민적 기반이 미비한 탈북단체는 단체 유지 자체가 어려운 위기 상황으로 내몰렸다. 탈북단체는 한편으로 중복세력 규탄 시위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탈북여성이라는 시위 참가 인력이 넘치는 국내 상황을 활용하여 국내 보수 세력의 정치 노선과 긴밀히 연대하며 단체의 명맥과 권위를 유지하고자 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보수 세력이 탈북이주민을 관리하는 방식 자체를 비판하였다. 이들은 남한사회 탈북이주민이 현 체제에 도구적으로 활용되는 데 그치는 한, 남한사회에서 이들이 바라는 안정과 권리를 결코 누릴 수 없다고 보았다.

시민단체로서 탈북단체가 직면하는 어려움은 이들이 남한사회 일반 시민의 후원을 기반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들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탈북단체의 출현과 성장의 기반인 남한사회 보수 세력도 근본적으로 탈북이주민집단과의 친화를 정치 공학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보수 세력이 탈북이주민집단을 동반하는 것은 이들이 보수 정권의 창출과 지속이라는 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구도에서 탈북이주민집단은 기본적으로 조직의 존속과 유지를 위한 도구적이고 수단적인 존재 이상이 될 수 없다. 체제의 이해와 배치되는 탈북이주민집단의 주체화된 욕망과 요구, 기존 관리 방식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는 허용될 수 없다.

탈북이주민집단이 남한사회 보수 세력이 구축한 질서를 향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보수 세력의 ‘이중대’로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위하여 ‘인정의 정치’를 구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²¹⁾ 남한사회 보수 세력은 탈북이주민집단을 남한사회에 동화되어야 할 부차적이고 종속적인 집단으로 간주하며 정치권력의 창출과 지속에 기여하는 도구적 가치 이상의 인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탈북이주민집단의 ‘인정의 정치’는 보수 세력의 목적을 과잉 달성하던 이력을 넘어 스스로 계토화하며 더욱 격렬한 대립 양상을 전개될 위험이 있다.

본 논문은 탈북단체의 출현과 활동을 국내외 정치적 맥락에서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로 볼 때, 탈북단체의 현재 상황은 남한사회가 보다 상호적인 차원에서 이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이 시민단체로서 안정된 기반을 구축하고 건강한 활동을 전개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이들에게 강제하고 있는 남한사회의 냉전적 대립 프레임과 권위적 동화주의 인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탈북단체 역시 남한사회 시민의 지지와 후원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시민단체의 역량을 만들어나가는 자성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논문접수일: 2015년 6월 1일, 논문심사일: 2015년 6월 27일, 게재확정일: 2015년 7월 10일

21) 호네스에 학대, 폭력, 차별과 배제, 그리고 특정한 생활방식과 신념을 열등하고 결합이 있는 것으로 평가 절하 하는 등 사회적 동의 부재에 대한 경험은 개인의 정체성을 침해당하는 체험이자, 사회적 인정투쟁의 동력을 형성하는 매개가 될 수 있다 (Honneth 1992: 150 이하; 이희영 2010: 213).

참고문헌

강명옥

2006 “북한인권과 국제사회 개선과 비교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권해수·남명구

201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및 비판: 박사학위논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1-11.

금명자

2015 “한국심리학회의 북한 및 북한이탈주민 관련 연구동향: 한국심리학회지 게재논문 분석(2000~2013),” 『한국심리학회지일반』 34(2): 541-566.

김광웅

2011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배제’와 ‘사회성’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기선

2013 “국내 탈북자단체 형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신희

2012 “탈북청소년의 시민성(市民性) 연구,” 경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영민

2009 “미시성의 정치: 논어의 경우,” 『한국정치학회보』 43(1): 29-44.

김영석

2011 “탈북자단체의 대북빠라가 남북한에 미치는 영향: 2003~2010년을 중심으로,” 북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유정

2012 “북한이탈 청소년의 이산경험,”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중태

2014 “북한이탈주민의 직장생활과 적응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남한출

신 근로자의 상호인식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태현 · 노치영

2003 『재중북한이탈여성들의 삶』, 서울: 하우.

김태원

2012 “글로벌 생활세계로서의 다문화사회: 공존의 가치에 대한 탐색적 연구,” 『다문화와 인간』 1(1): 63-88.

김한나

2010 “온라인 공간의 대북 시민단체 간 이념과 네트워크: 사회 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현경

2009 『현상학으로 본 새터민(탈북이주자)의 심리적 충격과 회복경험』, 파주: 한국학술정보.

김희순

2009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에 미치는 요인 연구: 인적자본 및 노동시장 구조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나경아 · 한석진

2009 “탈북인예술단체의 사회문화적 정체성 및 가치에 관한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26: 65-85.

문성훈 · 이현재 역

1996 『인정투쟁. 사회적 갈등의 도덕적 형식론』, 서울: 동녘(Honneth, Axel 1992 Kampf um Anerkennung, Suhrkamp).

박광택

2014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 대한 연구 동향과 과제,” 『직업과 고용서비스연구』 9(2): 15-29.

박명규 · 김병로 · 송영훈 · 양운철

2011 『노스코리안 디아스포라: 북한주민의 해외탈북이주와 정착실태』,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박정란

2006 “여성 새터민의 직업 가치와 진로 의사 결정과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북한이탈주민 연구 동향과 과제: 주제, 방법, 내용,” 『KDI북한경제리뷰』 14(5): 54-71.

신난희

2008 “미국거주 탈북자의 생활과 적응,” 『제4차 세계한국학대회 자료집』, 한국학중앙연구원 세계한국학대회 공식 홈페이지.

2014 “탈북여성 디아스포라 경험 연구: 탈북여성의 적응 전략과 행위성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양수경

2013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적응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오생근 역

2004 『감시와 처벌: 감옥의 역사』, 서울: 나남(Foucault, Michel 1979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the prison, Vintage Books).

오원환

2011 “탈북 청년의 정체성 연구: 탈북에서 탈남까지,”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유지웅

2006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배제’ 연구: 소수자의 관점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윤여상

2001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영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윤혜순

2014 “탈북청소년 연구동향과 과제,” 『청소년연구』 21(11): 125-149.

이민영

2004 “북한 이문화부부의 가족과정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네러티브 탐구방법을 활용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준태

2015 “국내 북한 인권 NGO의 형성, 이념과 활동에 관한 연구: 보수 지향적 단체들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희영

2010 “새로운 시민의 참여와 인정투쟁: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구성에 대한 구술 사례연구,” 『한국사회학』 44(1): 207-241.

임석훈

2013 “민간단체 풍선날리기와 분단 번역의 정치-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9(2): 5-32.

정병호

2004 “탈북 이주민들의 환상과 부적응: 남한사회의 인식혼란과 그 영향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10(1): 33-62.

정운중

2005 “탈북자 정착지원금 축소 파장,” 『북한』 2005(2): 122-128.

최대석·박영자

2011 “북한이탈주민 정책연구의 동향과 과제: 양적 성장을 넘어서,” 『국제정치논총』 51(1): 187-215.

Scott, James C.

1985 *Weapons of the Weak: Everyday Forms of Peasant Resistanc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Robertson, Roland

2003 *Globalization Critical Concept in Sociology*, London: Routledge.

〈자료〉

탈북단체들,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 결성. 인터넷 기사, 자유북한운동연합
2010. 10. 9. http://www.ffnk.net/board/bbs/board.php?bo_table=news&wr_id=527

2만여 탈북자들이 하나로... 협상창구 단일화. 인터넷 기사. New Daily
2013. 11. 27.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80578>

탈북 단체장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불편한 간담회. 인터넷 기사 통일
신문 2014. 2. 14. [http://unityinfo.co.kr/sub_read.html?uid=16368
& section=sc4§ion2=](http://unityinfo.co.kr/sub_read.html?uid=16368§ion=sc4§ion2=)

탈북단체들, 정옥임이사장퇴진운동 전개. 인터넷 기사 New Focus 2014. 9.
23. <http://newfocus.co.kr/client/news/viw.asp?cate=C01&mcate=M1003&nNewsNumb=20140914514>

〈Key concepts〉: North Korean defectors' organizations,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North Korean democratization movements, Unification Pot Activities, denunciation rally against the followers of North Korea, NED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The Activities of North Korean Defectors'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and the Politics of Recognition in the Context of Politics at Home and Abroad

Shin, Nanhe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appearances and the activities of North Korean Defectors'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and the politics of recognition in the context of politics at home and abroad. In this paper, I view the South Korean society as the glocal life world, but not the de-politicized everyday life world. Especially, in Korean peninsula where the divided system has been developed since the national liberation from Japan, the situation of the new-cold war shows the dynamics between the political context in the South Korea and the North Korean defector-migrants' behaviors.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appearances and the activities of

* Institute for Multicultural Studie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Research Professor

North Korean Defectors'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through the North Korean democratization movements, Unification Pot Activities, and the denunciation rally against the followers of North Korea. They have grown rapidly with the funds for North Korean democratization from NED, BDHRL etc. and the North Korean defector-migrants' settlement support systems by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These organizations have expanded their activities, including not just the North Korean issues but also the issues of South Korean politics. They have faithfully represented and practiced the interests of the conservative powers in South Korea. The organizations of North Korean defector-migrants in South Korea have been also pursued, through those activities, their political empowerment and 'the politics of recognition'.